

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추이 및 시사점

박진혁 | 부전문위원(3705-6149)

김위대 | 경제리스크분석부장(3705-6240)

■ [동향]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경계감 확산 등으로 상호관세 발표 전후 상품 수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공급망 상황 변화가 관측

- 4월 이후 미 관세(對 캐나다, 멕시코, 중국 관세 및 보편관세) 발효, 교역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미 교역 위축 등으로 물류 수요가 크게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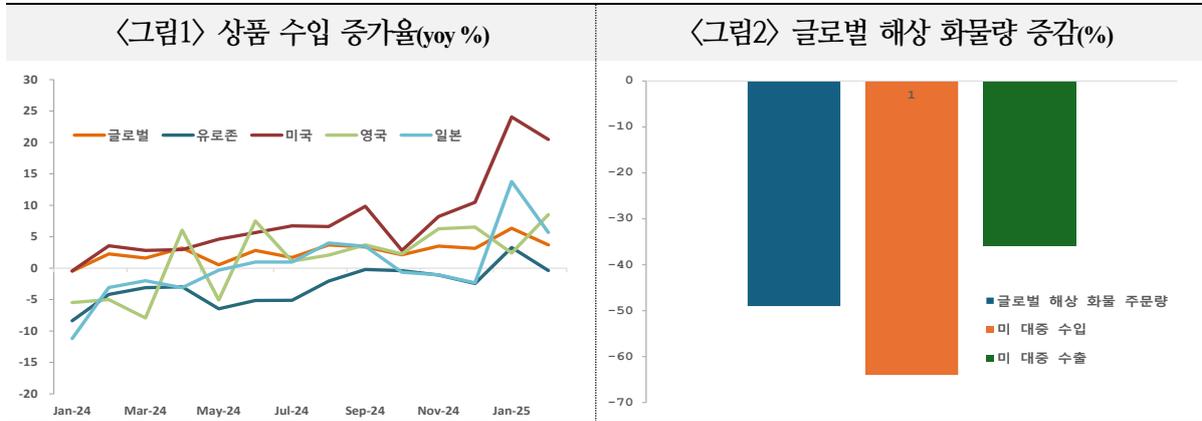
■ [평가]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, 이 과정에서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재점화될 가능성 상존

□ [동향]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경계감 확산 등으로 상호관세 발표 전후 상품 수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운송 부문¹을 중심으로 공급망 상황 변화가 관측

- 관세 인상 전인 1~3월 가계의 선구매 증가, 기업들의 재고 확보 등으로 금년 1분기 미국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일부 물류 정체가 시현
 - 선진국 상품 수입은 미국의 강력한 수입수요 등에 힘입어 금년 1월(9.0% yoy)과 2월(6.1%)에 큰 폭으로 증가. 글로벌 수출 주문 PMI도 작년 4분기 이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금년 3월(50.1) 기준선 50을 상회
 - 미국의 상품 수입량 증가율은 '24.11월 8.2%→12월 10.5%→25.1월 24.1%→2월 20.5% (네덜란드 CPB 기준 3월 미집계)로 급증하며 선진국 수입수요를 견인<그림>
 - 이에 따라 2~3월 미국행 물동량이 급증한 데다가, 북유럽국가들의 항만 파업, 미안파 강진(3.28일) 여파 등도 동반되면서 아시아, 유럽 등지에서 운송 지연이 심화
 - 3월말 상하이항 평균 대기시간은 2.4일 이상으로, 상하이-닝보항 출항대기 선박수도 180척에 육박하여 1월말(89척) 대비 큰 폭 증가(Kuehne Nagel)
- 반면 4월 들어서는 미 관세(對 캐나다, 멕시코, 중국 관세 및 보편관세) 발효, 교역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미 교역 위축 등으로 물류 수요가 크게 감소

¹ 공급망은 '노동, 원자재→생산→운송'을 구성요소로 하나, 최근 관세 부과에 따른 특징적인 현상이 주로 운송부문에서 관측되어 이를 중심으로 서술

- 캐나다·멕시코·중국에 대한 미국 관세 및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이후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운사들의 항로 조정, 운항 취소 사례 등이 증가<그림2>
- 글로벌 수출 주문 PMI는 3월 50.1→4월 47.2로 크게 하락하며 '23년 8월(47.0) 이후 최저치를 기록



자료: CPB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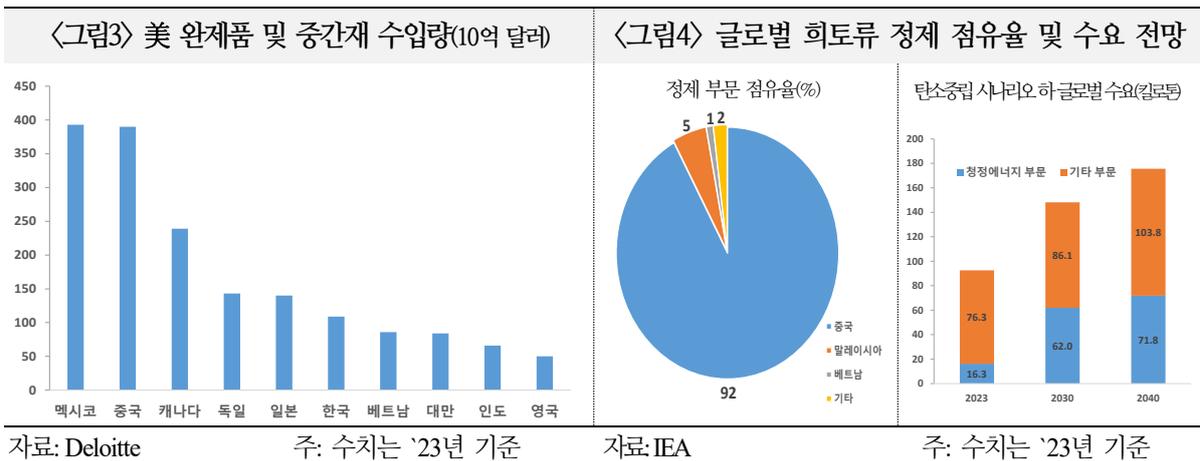
자료: Vizion, CNBC 주:3월 24-31일 대비 4월 1-8일 변화율

- 2분기 중 미국의 수입물량 감소로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 소지가 큰 데다 국별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 상존 등으로 단기내 운송 수요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소지
 - 미국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될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축소, 원자재·에너지 수요 둔화가 유발되면서 공급망 압력은 다소 줄어들 전망

□ [평가]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며, 이 과정에서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재점화될 가능성 상존

- 미 수입관세 인상에 따라 기업들의 교역경로 전환, 생산기지 이전과 같은 사업전략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공급망 네트워크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
 - 여타국 기업들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 약화로 상당수의 대미 수출물량이 대체시장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늘어날 전망<그림3>
 - 미 관세 적용을 받게 되는 무역규모는 EU 3,187억 달러, 중국 2,783억 달러, 일본 702억 달러, 캐나다·멕시코 638억 달러, 인도 529억 달러 등으로 추산(Bloomberg)
 - 중국이 수출경로 전환을 시도할 경우 캐나다·멕시코(약 22%, 유예중인 미 관세 등 적용 시), 라틴아메리카(13%), 영국(12%)을 중심으로 대중국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(CEPR)
 - 관세 협상을 거치면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가 ‘우호국’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멕시코·베트남·인도 등의 국가로 공급망 대체가 진행될 소지. 관세 부담이 큰 기업들은 저율관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 상향

- 다만 베트남(46%), 태국(36%), 인도네시아(32%) 등 주요 거점국가들도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 실효성이 과거 대비 제한적
- 추후 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상대국들의 보복조치 여부, 미중 무역갈등 향방²에 따라 공급망 경색 가능성이 상당
 - 최근 미국의 입항세 발표(4.17일)* 등으로 G2간 대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,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할 경우 운송-공급망 등을 무기화할 가능성 상존
 - * 중국 선사 및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 각각 톤당 50달러와 18달러(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) 부과 예정. 이후 3년에 걸쳐 약 2~3배 인상할 방침
 - 세계 항구 100여곳에 대한 투자 등으로 중국이 해상무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해상네트워크를 대미 압박에 적극 활용할 전망
 - 또한, 중국은 외국기업들의 공급업체 다각화에 제약이 있는 특수화학 공급망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소지



□ [시사점]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위축 등 경제 영향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 만큼 대외의존도가 높고 주요국과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보다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,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문의: 02-3705-6149 혹은 jhpark@kcif.or.kr, 홈페이지: www.kcif.or.kr

² 5.12 일 양국이 90 일간 관세를 115%p 씩 내리는데 합의했으나 정치적·지경학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